

야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강력 성토

“총선 민심 거스르는 인사” 비판
민주 “尹, 정치할 생각 없는 듯”
국힘 “여야간 소통 절박한 의지”
윤 대통령 “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22일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임명되자, 실망감을 내비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의 윤핵관 이력, 망언, 친일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총선 민심 거스르는 인사”라며 이번 인선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친운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냐”고 되물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라며 “국민 통합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정 비서실장은 4·10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마주 앉아 대화하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

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둘러막기보다도 더 나은 양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 비서실장을 겨냥,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 있지 않다”며 “당심 100%를 밀어붙인 사람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친일 발언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현 부대변인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인사다. 정 의원의 말이 늘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과거의 막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년 간의 기자 생활과 5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소통의 적임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에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다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모자람에 대한 반성이자 더 세심하게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이 아니라 내각·당·야당·언론·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하면서 잘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5선 의원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운계로 분류된다.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尹, 전국민 지원금 제안 수용” 압박

조국, 특검법 수용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앞서 국정 기초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민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을 했다”며 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장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5가지 국정농단 사안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방향 키는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소통하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영수회담에 임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쇼

인지 아닌지 즉각 간파할 것이라ں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초를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음주 자제 등 10가지를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 내달 2일 마무리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국회에서 제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민주연합은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모여 만든 위성 정당으로 지난달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4·10 총선에서 총 14명이 당선됐다. 이 중 민주당 몫 당선인은 8명이다. 진보당 정혜경·전종덕 당선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쳐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들어온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거취를 고민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서미화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윤 당선인은 시민사회와 상의해 판단하겠다고 결정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부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2일까지 더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 민행배 단장과 위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토론회 연다

내일 무안 초당대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와 전남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대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연구원 양철수 매력도시 연구실장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

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시 주변지역 발전 구상 계획’을 제시한다. 또 통합공항(민+군) 건설 추진현황과 시설배치안, 소음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소음영향권 지역 지원방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특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예비이전후보지의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 국가차원 지원 규모도 공개된다.

제2주제 토론회에서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당위성’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 경과’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 검토’ ‘무안국제공항 연계 서남권 지역발

전 방향’ 등이 논의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은 최치구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박영환 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제철 전 한서대학교 공학행정학과 교수, 윤석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이사,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군공항 시설, 공항소음,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회 마지막은 무안군민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병하·곽지혜 기자

영수회담 실무협상 연기... 민주 “일방 취소”

22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대통령실의 돌연 협상 연기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일방 취소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정진석 대통령

실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연기 요청에 유감을 표하며, 영수회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이번 주 중으로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 의제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24일이나 25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돼 첫 영수회담 실무작업을 맡게된 홍철호 수석은 “반나절 차이”라며 “오늘(민주당 측에) 연락을 드려서 내일 바로 연결성을 갖고 천준호(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장과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